

복합안보 위협 대응... 광주시,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광주광역시시는 10일 시청 총무실에서 '2026년 1분기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 사이버 공격과 드론을 활용한 신종 위협 등 복합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제31보병사단, 광주경찰청, 국정원 광주지부 등 민·관·군·경·소방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3월 23일에 개최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연계해 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25년 통합방위 추진 성과와 2026년 추진방향'을, 31보병사단은 '2025년 군사대비태세 평가 및 2026년 대비방향'을, 국정원은 '북한 대남 위협 전망'을 각각 보고했다.

이러한 주제토의에서는 ▲북한재난 관련 통합방위요소 대응방안 ▲사이버 위협과 연계한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방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이버 공격, 무인기 활용 도발 등 전쟁양상이 첨단·지능화된 만큼 지역 단위 정보공유 체계 고도화와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참석



민·관·군·경·소방 30여개 기관, 통합방위태세 점검 위기발생 시 즉각 가동 등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

기관들은 평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합방위회의와 합동훈련을 통해 지역 안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안보와 재난은 더 이상 개별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계된 복합위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이 하나의 팀이라는 인식 아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제503보병여단 제2대대에 대한 기관표창과 통합방위 유공자 6명에 대한 광주광역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고흥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7억 2천만원 투입 지상 2층 규모... 계절근로자 20여명 입주

전라남도는 8일 고흥군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박선준 전남도 의원,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고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숙사 완공을 축하했다.

해당 기숙사는 2025년 전남도 자체 사업인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고흥 풍양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7억 2천만원(도비 1억 2천600만 원·군비 2억 9천400만 원·농협 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연면적 312㎡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는 총 6개실(4인실)의 숙소를 마련해 최대 24명이 생활할 수 있다. 숙박공간은 물론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이 마련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 4월 중 베트남 계절근로

자 2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인권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계절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지역농협 등과 협력해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지난 3월 준공한 영암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포함한 국비 사업 4개소와 도 자체 사업 7개소 등 총 11개소가 준공됐으며 연내 3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나선다.

남구는 9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고흥사랑 지정기부사업과 연계한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민과 출향민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남구, 1시간 1,000원 '공공 실내 놀이터' 만든다

내년까지 진행, 아이들 놀 권리 및 공간 확충

있다.

우선 남구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6억 5,000만원을 목표로 고흥사랑 기부금을 모을 계획이다.

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고흥사랑 기부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실내 놀이터가 조성되는 장소는 남구종합정사이다.

면적 264㎡(80평) 공간에 복합 놀이 존과 영유아 존, 역할·창의 존, 신체활동 존, 휴식·보호자 존, 어린이 화장실, 수유·기저귀 교환실 등을 만드는 게 남구의 구상이다.

실내 놀이터 이용 요금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에 1,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 동반한 부모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사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에 많은 주민들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연면적 500㎡ 이하·2층 이하인 건축물 120여 개소이다.

북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30년 경과·연면적 500㎡ 이하·2층 이하 건축물 대상 무상 점검 지원

점검은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의 주도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의 ▲기울기 ▲침하 여부 ▲옹벽 ▲배수구 ▲창호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우수부터 불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 2차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최종 점검 결과는 소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관리자는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 점검을 신청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북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존재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주민 모두가 안전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062-525-9775

1면에서 이어짐

제1호 공약으로 김 후보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민 후보는 '시민주권 정부'를 내걸었다.

통합지원금 20조원 사용처를 두고는 민 후보는 80%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제 육성과 사회안전망에 10%씩 배분하는 '8:1:1 전략'을 제시했고, 김 후보는 첨단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에 각각 5조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를 균형 발전과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는 TV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난타전을 벌인 바 있어 치열했던 공방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역별, 권역별 당원과 유권자 분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관리당원은 광주가 11만2,000명, 전남이 22만 명에 육박해 전남이 2배 많고, 유권자도 광주가 120만

명 안팎, 전남은 160만명에 가깝다. 광주·전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 광주와 인접 시·군이 158만, 동부권이 72만, 서부권이 44만 명으로 권역별 편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광주와 전남이 단순 맞대결하면 전남이 유리한 형국이지만, 동부권이 캐스팅 보트로 나설 경우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고, 예측불허 판도로 빠져들 수 있다. 광주 지지세력들이 전남 기반 김 후보를 지지하고, 전남 곳곳에서 광주 기반 민 후보가 강세를 띠는 등 지역 구도 균형 현상도 결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동부권 주철현 후보와 연대한 민 후보가 '전남 표심'을 얼마나 잡식할 지, 반대로 김 후보가 '8년 도지사 프리미엄'을 입고 '안방 전남'을 수성할 수 있을 지도 성패의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결선은 단순한 통합시장 선출을 넘어 차기 당권, 멀리 대권을 겨냥한 당내 해계모니아도 맞닿아 있고, 이 때문에 진영 논리가 수면 아래서 작동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결선 결과에 중앙과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

